

아동학대개입시 상담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이 호 중*

목차

- I. 서론
- II. 아동학대 상담원의 신변위험 실태
 - 1.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폭력노출에 대한 연구결과
 -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최근 통계
- III. 상담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재정립의 관점에서
 - 2. 경찰과의 협력체계의 재정립
 - 3.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개입체계의 개혁과제
 - 4. 형사사법체계 상의 신변안전대책
- IV. 맺음말

I. 서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현장조사나 상담, 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개입한다. 그런데 아동학대는 분명히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 인식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신체적 학대는 부모의 아동에 대한 징계행위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서적 학대는 아예 학대행위라는 인식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친권 관념 속에 과묵히 있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보호전문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기관의 현장조사와 사례개입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친권 및 프라이버시권과의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더구나 상담원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학대행위자나 기타 보호자로부터의 폭력 등 공격에 취약하게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겪는 신변위험의 강도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경우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현장조사나 보호조치 등 상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대행위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 등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면 그러한 신변위협행위는 대체로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상담원의 입장에서는 고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처벌을 강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사후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어 신변안전대책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거의 없다. 아동학대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담원의 입장에서는 신변위협에 대하여 고소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례개입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이는 결국 피해아동의 보호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대책을 검토함에 있어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상 상담원의 신변위험을 구조적으로 증대시키는 요인을 가늠해 보고 그러한 신변안전에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입시스템과 정책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현행 아동복지법의 체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경찰의 수사대리인’과 유사한 역할을 떠맡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조치가 실효성있게 담보되지 못하는 법제도적 결함의 문제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명하면서 상담원의 신변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시스템의 개혁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의 관심은 “구조적으로” 상담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II. 아동학대 상담원의 신변위험 실태

1.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폭력노출에 대한 연구결과

최근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207명을 대상으로 2007년 한 해 동안의 폭력경험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2.8%(130명)로 나타났다¹⁾ 한다. 아동보호서비스 분야의 근무연한이 많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폭력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경험한 폭력의 유형을 보면, ‘언어 폭력’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93.8%, 122명), 다음으로 ‘신체적 공격’을 경험한 경우가 35.4%(46명), ‘기물파손’은 16.2%(21명),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1.5%(2명)로 집계되었다.²⁾ 그리고 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이 아동의 친부모였으며(80.8%), 성별로는 남성 가해자가 70.0%, 연령별로는 40대가 53.1%를 차지하고 있다. 폭력의 발생시점을 보면, 첫 번째 만남에서 가장 폭력발생이 많았으며, 폭력 발생 장소는 절반 이상의 폭력이 학대피해아동의 가정이었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와의 대면접촉에서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자는 이를 종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40대 연령의 아동의 친부에 의해서 주로 첫번째 아동 가정에서의 현장조사 상황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³⁾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최근 통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최근 2008년 5월 1일 ~ 7월 31일 사이에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생한 상담원의 신변위험 사례를 집계한 결과, 43개소 중 36개소에서 신변위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신변위험은 현장조사 시에는 물론이고, 보호조치 등의 사례개입 시, 그리고 사례종결 이후

1) 신준섭,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클라이언트 폭력 연구 :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을 중심으로”, 『한국 아동복지학』 제27호, 2008, 47면.

2) 신준섭, 앞의 글, 51면.

3) 신준섭, 앞의 글, 52면.

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신준섭의 연구에서는 신변위협 사례가 주로 현장조사 등 초기개입시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현장조사시보다 보호조치 등의 사례개입 시점에서 신변위협사례가 더욱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신변위협사례의 유형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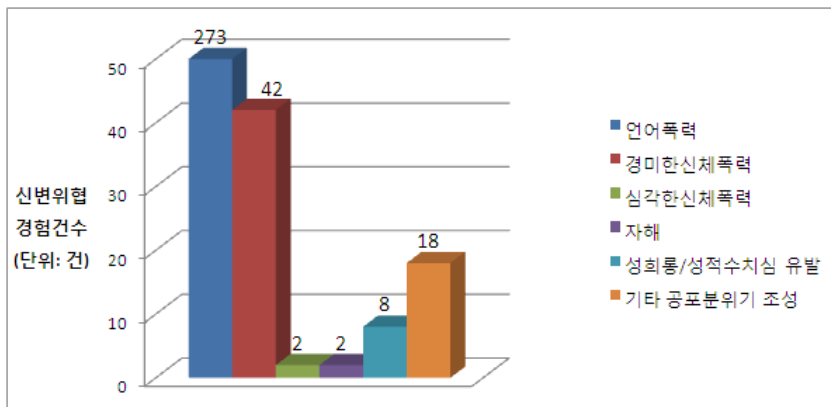
<표> 업무과정에 따른 신변위협 유형

(단위 : 건)

신변위협유형*		언어 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자해	기타 공포분위기 조성	성희롱/성적수치심 유발	총 계
업무 과정	현장조사시	11	6	—	—	1	—	18
	경찰비동행	79	18	—	1	3	1	102
조치 후 사례개입 시		143	18	1	1	13	7	183
사례종결 이후 (학대행위자가 보호/ 형사 처분을 받은 이후 신변에 위협을 가한 경우 포함)		40	—	1	—	1	—	42
총 계		273	42	2	2	18	8	345

* 중복포함

그리고 상담원이 경험한 신변위협 사례의 유형은 아래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언어폭력과 경미한 신체폭력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심각한 폭력유형도 보고되고 있다.



4) 이하의 통계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내부통계를 참고한 것이다.

Ⅲ. 상담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재정립의 관점에서

(1) 현장조사 및 응급격리조치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그 현장을 조사하고,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이 때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시행령 제18조 제2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의 발견·보호·치료와 아동학대예방을 주요 업무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수사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상담원의 현장조사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는데 목적이 있다.⁵⁾ 현장에 출동한 상담원은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등과의 상담을 통해 학대여부, 학대의 위험성과 재발가능성, 아동의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게 된다. 한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의 몫이다.⁶⁾

그런데 관념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와 경찰의 수사를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조사에서 양 기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장조사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의 출입, 피해아동과의 면담, 학대행위의 혐의를 받는 자와의 면담 등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수사와 차이가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부모가 상담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상담원의 입장에서 현장출입 및 아동에 대한 면담 등 조사를 강제할 법적 권한은

5)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19면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 권한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6)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라도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격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없다. 부모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피해아동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부모를 설득하지 않는 한 현장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찰도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학대 현장인 가정에 함부로 들어가서 주거·신체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처럼 상담원의 현장조사는 실제 법적 권한은 거의 없는 반면에 오히려 의무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지만, 현장조사는 상담원과 학대행위자 사이에 첨예한 긴장과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누군가의 신고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방문하였을 때, 부모가 아동학대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가정의 프라이버시 및 친권에 대한 위협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담원의 신변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아래 <사례 1>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사례 1>7)

상담원이 친부상담을 위해 가정방문하였을 때, 친부는 이성을 잃고 옆에 있는 연탄보일러 뚜껑을 집어 들고 상담원에게 던지려고 하였음. 이에 상담원이 친부를 진정시키자 친부가 보일러뚜껑을 바닥 쪽으로 던진 것이 동행한 상담원의 발등을 찍어 동료상담원이 전치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음. 친부는 바로 집안(부엌)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상담원이 친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친부를 온몸으로 잡았음. (상담원이 온몸으로 친부를 만류한 이유는 이미 친부가 칼로 사람을 찌른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아동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고, 당시 친부가 칼을 찾으려 가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임). 상담원이 친부를 온 몸으로 저지하는 상황에서 친부는 상담원을 힘으로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상담원은 왼쪽 어깨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음. 당시 상담원은 어깨가 너무 아파 그 자리에서 힘으로 어깨를 끼워 맞췄으며 병원진단결과 전치 2주였으나 탈골된 상태로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기간이 더 나왔을 것임. 이후 본 기관의 고발조치로 친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부는 수시로 상담원에게 연락을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칼로 찌른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함.

7)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 실태』(2008) 중에서 사례 발췌. 이하 같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응급조치로서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인근의 아동보호시설 또는 치료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응급조치로서 아동을 격리보호할 수 있는 기간은 “3일 미만”이다. 3일 이상의 지속적인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의 보호조치(대리양육보호, 가정위탁보호, 보호시설입소)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⁸⁾

아동의 응급격리조치는 아동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든가, 아동이 가정 내에 계속 머무를 경우에 학대가 지속될 위험이 매우 큰 경우 등 긴급상황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의무이자 권한이다. 응급격리가 필요한가 여부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현장에 출동한 상담원의 몫이다. 응급격리조치는 피해아동의 격리가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될 경우에 상담원이 학대행위자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인데, 학대행위자가 부모 내지 보호자인 경우에는 상담원이 현장에서 피학대아동을 학대부모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려 해도 부모의 완강한 저항이나 반대로 격리보호를 관철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응급격리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상담원과 학대행위자 사이의 마찰과 갈등을 증폭시키게 된다.

이러한 갈등상황은 상담원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 그럼에도 상담원의 현장조사가 실질적으로 수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 학대행위자에게 그렇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경찰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일차적인 현장조사와 강제적 응급격리조치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현장조사는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며, 정확한 사례판정과 위기개입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로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어느 기관이 현장조사 및

8) 이 경우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보호조치의 결정 전에 필요하다면 “일시위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법 제10조 2항).

응급격리조치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장조사 및 응급격리조치가 아동학대 개입정책에서 지니는 중요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아동학대 개입 시스템의 문제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현행 아동복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라 함)의 차이를 중요하게 지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과는 달리, 가정폭력특례법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가정폭력특례법 제5조). 이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격리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찰의 임무이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상이하기는 하지만, 현장조사와 응급격리조치는 아동보호기관(Child Protection Service) 직원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경찰과의 공조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신고 초기단계에서부터 CPS와 경찰 사이에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CPS 직원은 현장조사에 있어서 아동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라든가, 현장조사시 긴급격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CPS 직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경찰과 협조하여 함께 현장조사에 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오레곤주의 행정규칙을 보면, CPS 직원과 경찰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i) 아동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ii) 가족들이 피해아동에 대한 관찰을 거부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는 경우, iii) 피해아동에 대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는 정보가 있는 경우, iv) 아동에 대한 면담이 필요한 경우, v) 가족들의 행동이나 환경, 상황 등으로 볼 때 CPS 직원에 대한 위험을 인정할 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vi)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를 규정해 놓고 있다.⁹⁾

9) The Oregon Administrative Rule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CHILD WELFARE

(2) 아동보호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등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사례판정을 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본연의 임무라고 말할 수 있다.

2007년 1년 동안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5,581건에서 피해아동에게 취해진 최종조치를 보면, ‘원가정보호’가 73.2%(4,083건), ‘격리보호’가 25.0%(1,397건), 사망 0.1%(7건), ‘타기관의뢰’가 1.7%(94건)로 나타나고 있다.¹⁰⁾ 예년의 경우처럼, ‘원가정보호’의 비율이 여전히 매우 높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있지 않는 이상 격리보호로 인한 가정해체보다는 원가정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동학대사건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80%를 넘는 상황에서 학대행위자의 위험요인과 가정 내의 학대유발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담보되지 않은 채로 원가정보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동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수도 있다.

PROGRAMS, DIVISION 15 INTRODUCTION TO CPS RULES

413-015-0415

CPS Assessment Activities

Whenever possible, the CPS worker must coordinate assessment activities with LEA in the following situations:

- (i) Presence of danger. When the CPS worker has information that indicates that the child is unsafe right now.
- (ii) Family cooperation. When the CPS worker has information that the family may not allow the CPS worker to observe the alleged victim or other children in the home.
- (iii) Protective custody. When the CPS worker has information that a child may need to be placed in protective custody.
- (iv) Child interview. When the CPS worker and the LEA officer must each interview a child, it is preferable to coordinate the interviews to reduce the number of interactions with the child.
- (v) Worker safety. When the CPS worker has information that indicates the family behavior, circumstances, or situation could pose a danger to the CPS worker.
- (vi) Crime committed. When the CPS worker suspects or receives a report that a crime may have been committed.

10)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7』, 2008.4, 57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격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친권자인 학대행위자의 완강한 거부 내지 저항 때문에 격리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일 것이다.

보호조치 단계에서 상담원에 대한 신변위협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마도 격리보호를 둘러싼 학대행위자와의 마찰과 갈등이 주된 요인이 되는 듯하다. 아래의 <사례 2>는 그 전형에 속한다.

<사례 2>

아동의 그룹홈 입소 후, 친부는 감정기복이 심하고 분노조절이 안 되는 모습으로, 술을 마신상태에서 사무실에 찾아옴. 아동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며 여자 상담원 이름을 부르며 눈을 부릅뜨고 위협적으로 협박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 상담원과 몸싸움을 벌임. 이 과정에서 상담원의 얼굴을 쳐 상담원의 안경이 날아감. 본 기관에서 지구대에 신고하여 친부를 귀가 조치하였음.

몇 달 후 친부는 다시 사무실을 찾아와 아동의 귀가에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쳐 탁자를 덮고 있던 유리를 깨뜨렸고, 탁자 유리가 산산조각이 남.

위와 같은 신변위협 사례를 시스템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이 상담원의 신변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구조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진다(법 제10조).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지만, 실질적인 보호조치의 결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학대행위자의 친권제한은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조치임에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호조치와는 별도로 법원의 사법절차에 의하여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¹¹⁾

11)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지방자

이처럼 행정처분으로 행해지는 보호조치와 사법절차로서 행해지는 친권제한 조치의 이원적 시스템은 아동보호서비스의 통합적 체계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친권상실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저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피학대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친권행사를 둘러싸고 학대행위자와의 갈등과 마찰을 증폭시키는 시스템장애를 갖고 있다.¹²⁾

친권제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학대피해아동을 학대부모로부터 격리하는 보호조치를 취하려 해도 부모의 완강한 저항이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격리보호조치를 관철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부모 중 한사람이 학대행위자인 경우에 다른 보호자가 격리보호에 완강히 반대한다면 격리보호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격리보호조치에 친권제한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시설에 격리보호하더라도 정작 친권자가 귀가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기도 힘들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귀가조치를 거부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법시스템의 장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상황은 학대행위자인 부모에 대한 친권제한 내지 친권박탈이 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상담원과 학대행위자 사이의 마찰을 증폭시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집행해야 하는 상담원의 신변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3)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수사의뢰

상담원의 신변위협 사례는 상담원이 아동학대사건의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수사의뢰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종종 발생한다. 상담원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에 학대행위자는 상담원의 고발조치가 자신이 형사제재를 받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친고죄로 되어

치단체의 장에게 친권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청구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법 제12조).

12)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호중,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문제점과 전문법원제도의 도입방안 - 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친권제한 등의 유기적 연계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7.10.30., 213-215면 참조.

있는 강간죄 등에서 범죄자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자기가 처벌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상담원의 증언이 유죄입증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상담원의 법정증언도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양심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래 <사례 3>은 상담원의 법정증언이 차후 상담원의 신변안전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례 3>

성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 집행완료 후 출소한 친부는 기관으로 전화 및 방문을 하여 “당신의 증언으로 징역이 1년 6개월 더 늘어났다. 이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결백을 밝혀주지 않으면 무력으로 처치하겠다고 협박함. 친부는 이후 현재까지도 기관에 전화 및 방문을 하여 자신이 징역을 살게 된 핵심원인은 상담원의 증언이며, 따라서 그 상담원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법이 심판하지 못할 때는 자신이 심판하겠다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하고 있음.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사의뢰는 당연한 조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 등 수사의뢰가 상담원이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것은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그 구조적 원인을 추적해 볼 수 있다.

1) 저조한 수사의뢰건수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고발 등 수사의뢰하는 건수가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2007년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보면, 전체 5,581건 중 ‘지속관찰’이 4,306건(77.2%)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은 285건(5.1%)에 불과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대부분의 아동학대사건에서 고소·고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고 있다.¹³⁾ 다만, 성학대

의 경우에는 고소·고발조치가 27.9%(409건 중 114건)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신체학대나 정서적 학대의 경우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80% 정도인 것과는 달리, 성학대의 경우에 부모에 의한 경우가 38.4%에 불과하고 타인에 의한 경우가 37.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⁴⁾

이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¹⁵⁾

첫째, 아동학대사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모에 의한 학대사건인데, 이 경우에 학대행위자인 부나 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은 ‘원가정 복귀’라는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의 목표와 충돌되는 측면이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일회적인 형사처벌만으로는 가해자의 성행교정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인 부나 모를 처벌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가정의 붕괴 내지 생계곤란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는 또다시 아동을 방임이나 기타 학대받는 상황으로 내몰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입장에서는 고소나 고발을 한다고 하여 정작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리라는 보장이 별로 없다는 점도 고소·고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성폭력사건 등 일부 심각한 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학대사건의 수사에 미온적이며, 특히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 부모를 단순히 경고하거나 기껏해야 기소유예 정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특례법은 그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에도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¹⁶⁾

셋째,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여 보호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가 아동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아동의 행동과 진술을 왜곡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고, 학대피해아동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심리적·정서적 지

13)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7』, 2008.4, 86면 참조.

14)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7』, 2008.4, 81면 <표 6-3> 참조.

15) 이에 대해서는, 이호중, 앞의 글, 216면.

16)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경향에 대해서는, 이호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2008.9.30., 127-167면 참조.

원을 받지 못한 채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¹⁷⁾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고 중대한 학대사건이 아니라면 고발 등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제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현재의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은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보다는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튼 대부분의 아동학대사건에서 고발 등 적극적인 수사의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의 정당성에 대하여 수긍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자신이 처벌받게 된 원인을 상담원의 고발이나 증언 때문으로 돌려버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보복폭행 등의 위험이 자라나게 된다.

2) 아동학대사건의 수사와 상담원의 역할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이자 원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아동보호서비스의 제공자이면서 동시에 아동학대사건의 형사처벌에 있어서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을 떠맡고 있다는 점에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진행은 대체로 “신고-조사-개입-보호조치-고발 및 형사처벌”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사실상 학대행위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원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아동학대사건에 있어서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를 면담하는 등으로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조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개입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그 이후에 행해진다. 이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

17) 정윤수/이정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2권 제3호, 2003, 240면.

동보호조치 등의 사례개입과 고발에 뒤이어 “순차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 - 아마도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 실제로 초기수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떠맡게 된다.

그 결과 상담원들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 본의 아니게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방지와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도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실상 수사기관의 역할을 떠맡게 됨에 따라 그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상담원들이 수사와 형사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원한과 분노를 사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는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궁극적으로는 아동보호를 위한 서비스개입과 수사 등의 형사사법적 개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병렬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수사기관이 아닌 지위에서, 그것도 민간인의 신분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이 결정해야 할 역할을 떠맡고 있는 현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의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상담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협력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경찰과의 협력체계의 재정립

(1) 병렬적 협력체계의 구축

그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정작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협력체계는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외에도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도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할 의무를 지고 있다(법 제27조). 그런데 현장출동 및 조사의

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의무일 뿐 양 기관의 협력 체제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가운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아동학대사례에서 경찰의 초기개입은 매우 미온적이며, 실제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현장조사와 사례판정을 거쳐 고발이 이루어진 후에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협력체제는 “순차적”이 아니라, “병렬적” 협력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아동학대의 신고가 어느 기관에 접수되는가에 상관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항시적인 공조체제를 통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역할모형에 충실한 사건개입을 “병렬적 공조”로 진행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의 목표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아동학대의 방지”에 있는 만큼, 상담원들이 사실상 초기수사를 담당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범죄사건으로서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수사과 기소여부의 결정 및 처벌의 문제는 사건개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전적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상담원과 학대행위자 사이의 불필요한 적대성과 마찰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상담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비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복지서비스제공자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2) 현장조사와 응급격리에 있어서 상담원과 경찰의 협력

상담원의 신변안전의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은 초기의 현장조사와 아동에 대하여 응급격리조치를 취하는 때일 것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학대 신고사건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공동으로 현장조사에 임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경찰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절차를 분담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체제는 상담원의 신변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

고,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들이 마치 “경찰수사의 대리인”인 것처럼 비쳐지는 경향을 탈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럼으로써 차후의 지속적인 사례개입에 있어서 상담원들은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모형에 보다 충실하게 다가갈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상담원들이 처한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2008년 10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입법예고하였던 「아동·청소년복지법안(아동복지법전부개정법률안)」¹⁸⁾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 개정안 제22조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서로에 대하여 현장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행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⁹⁾ 이는 아동학대사건의 현장조사와 응급격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상담원들이 처할 수 있는 신변위험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올바른 개정방향이다.

3.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개입체계의 개혁과제

(1) 아동학대사건의 반복적 성격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적 처우개입의 필요성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건은 낯선 사람의 폭력사건처럼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아동학대는 대개 누적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등 학대행위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18) 이 법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의되지 않았다.

19) 개정안 제22조(응급조치권한 등) 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상호간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은 대부분 상담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원치료, 심리검사, 가족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는 그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아동학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피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못지않게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치료적 처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에 학대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의와 설득에 의하여 학대행위자에게 전문화된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아동학대사건에 가정폭력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학대행위자에게 수감 명령이나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부과함으로써 가해자의 성행교정에 필요한 치료적 처우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행 가정폭력특례법 하에서 가정폭력사건의 30% 정도만 가정법원에 송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에서는 가정구성원 사이에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던 경우에 그 사건의 지속적·권력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로 일회적인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리하여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 이러한 일회적 처리는 폭력의 종식을 가져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복폭행 등 학대행위자의 폭력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2) 아동보호서비스의 효과적 개입을 위한 수단으로서 친권제한조치의 결합 필요성

현행법상 민법과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친권상실제도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학대행위자에 대한 친권제한조치는 그 자체로 징벌적 성격을 지니는 제도라기보다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²⁰⁾

20) 오정수 외, “피학대아동의 권리보장과 공적 친권개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21호, 2006, 53-55면.

아동을 가정으로 격리하여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물론이고 원가정 내에 아동이 머무르게 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인 부나 모의 친권행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명확히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만, 친권의 상실은 학대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아동의 보호를 위한 최후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4. 형사사법체계 상의 신변안전대책

(1)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신고자와 증인보호제도의 활용가능성

1) 신고자 및 증인보호의 내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나 증인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고자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및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보좌인의 지정”, “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인적 사항의 공개금지”, “신변안전조치 실시”, “피고인 등과 관련한 주요 변동사항 통지” 등이다.

① 보좌인의 지정

사법경찰관·검사 또는 법원은 특정범죄의 신고자나 증인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 등 보좌인’(이하에서 “보좌인”이라고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특정범죄신고자 등보호법 제6조 제1항). 이는 보좌인을 둠으로써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공판 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② 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나 증언 등과 관련하여 ‘조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나 증언을 한 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에서 “인적 사항”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제1항). 인적 사항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하며(동조 제7항), 다른 사건의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검사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②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③ 범죄신고자등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 등 공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으나, 범죄신고자나 증인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동조 제2항).

③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동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나 증언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동법 제8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7조).

또한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증인선서·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동법 제11조 제3항), 증인으로 소환받은 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범죄신고자나 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동조 제5항).

조서 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나 증언자 등으로

하여금 조서 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하며(동법 제7조 제4항), 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범죄신고자나 증인 등으로 하여금 선서서에 가명으로 서명·무인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4항).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신변안전조치의 실시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와 증인 및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제1항).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범죄신고자나 증인 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로는 ①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③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④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⑤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가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7조), 신변안전조치를 요청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6조 제3항).

⑤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사항 통지

범죄신고자나 증인 및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신고자나 증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에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 및 법원의 처분내용, 재판선고 기일이나 선고내용 및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 중

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변에 관련된 변동사항을 신고자나 증인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5조). 다만 이는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주요 변동사항을 일일이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아동학대사건에서 법정증언을 해야 하는 상담원의 경우 적용가능성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신변안전조치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신고자나 증인의 신변안전을 도모하는데 매우 유용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증인의 인적 정보의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증인이 실제 법정증언을 한 후 범죄자 측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유용한 조치이다.

그런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그 범명에서도 드러나듯이, 위와 같은 신변보호조치를 적용하는 대상을 강력범죄나 마약류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사건은 이 법이 규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법정증언 등으로 학대행위자로부터 보복의 위험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증인보호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학계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신고자나 증인의 보호는 특정범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모든 범죄사건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개진되고 있다.²¹⁾ 모든 범죄사건에 있어서 신고자나 증언을 한 사람은 그에 관련된 신변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서작성 시 신고자나 증인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는 것은 예산이 그다지 크게 수반되지 않는 조치이기 때문에 굳이 특정범죄에 한정할 필요 없이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에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는 실질적인 경찰인력의 보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라서 이를 모든 범죄에 확대적용하는 것은 당장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21) 송광섭, “범죄피해자보호의 현황과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저스티스』(한국법학원) 제83호, 2004.12., 255면.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아동학대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에 그 성명 등 인적 사항의 조서 기재와 공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는 상담원의 신변보호에 상당히 유용해 보이기 는 하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통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현장조사 시에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고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조사의 목적과 프라이버시보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조사의 협조를 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아동은 물론 학대행위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담원의 신원이 학대행위자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상담원은 단순히 일회적인 증언을 하는데 그치는 강력범죄사건의 증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다. 따라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하여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조서 기재 등에서 그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조치는 아동학대사건에서 상담원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아동보호서비스제공자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이다.

(2) 조사방해 및 신변위협행위의 처벌문제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지도원이나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30조). 아동복지지도원이나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1조 제2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처벌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대행위자 등이 상담원의 현장조사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처벌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폭행죄 내지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2008년 10월 입법예고되었던 「아동·청소년복지법안(아동복지법전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학대행위자 등 아동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아동학대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및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직원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폭행·협박·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면서(제22조 제6항), 그 처벌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91조 제3호).

이 규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아동학대의 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폭행이나 협박이 행사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나 폭행죄, 협박죄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 제91조는 “현장조사의 거부”에 대해서만 특별히 처벌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사의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이 현장조사에 임하는 상담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규정의 성격을 가늠해 보면 상담원의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의 의미는 매우 약하고 지엽적인 것이다. 상담원의 신변에 위험을 야기하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는 ‘현장조사의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규정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가 더욱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볼 때, 이 규정은 학대행위자나 보호자로 하여금 사실상 현장조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의 임의적 성격을 강제적 조사권한으로 탈바꿈시켜 버리는 의미를 담고 있어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간인 신분인 상담원에게 영장없이 현장을 출입하고 신체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도록 강제적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장조사의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은 상담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규정이라는 차원에서 협소하게 이해할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문제는 상담원의 조사권한의 질적 성격에 관하여 지극히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안고 있다.

(3)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예를 들어, 아동학대행위자가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는 경우에 상담원에 대한 보복적 폭력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로부터 상담원의 신변안전을 도모하고 아동학대행위자의 보복적 폭력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의 구속 및 석방, 출소사실 등의 정보를 상담원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유용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상 보복의 우려가 있는 신고자나 증인에 대해 범죄자의 석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아동학대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정보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제도는 2005년 12월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에 처음으로 도입된 바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는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6년 5월 제정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관련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국가기관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통지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1. 수사관련사항 : 수사기관의 공소제기·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 중지·이송 등 처분 결과
2. 공판진행사항 : 공판기일, 공소제기된 법원, 판결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여부 등

3. 형집행상황 :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상황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명령의 개시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그리고 이 규정과는 별개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의 정보권 제도는 범죄피해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상담원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다음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개입과 보호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동안은 그 사건 학대행위자의 출소사실 등 신병에 관한 정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유용할 것이다. 아니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인 아동을 대리하여 정보통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IV. 맺음말

냉정하게 말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현장조사와 상담, 사례개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대행위자로부터의 폭력 등 신변안전의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는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학대행위자의 친권 및 가정에 대한 권리와 충돌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가 이 글에서 관심을 둔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절차와 법체제상 상담원들이 겪는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을 법제도적으로 세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장조사 등 초기개입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상담원들이 사실상 수사업무를 떠맡고 있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업무분담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체적인 법체계 안에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아동학대의 재발방지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라는 위상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상담원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는 학대행위자, 특히 구속되었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학대행위자의 신병에 관한 정보를 상담원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보복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문투고일 : 2009. 6. 9, 논문심사일 : 2009. 6. 18, 게재확정일 : 2009. 6. 19.]

▶ **주제어** 아동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현장조사, 신변보호

■ 참고문헌 ■

- 박광민/강석구,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제도의 강화방안』, 대검찰청 연구용역과제, 2008. 10.
-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7』, 2008. 4.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2008.
- 송광섭, “범죄피해자보호의 현황과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제83호, 2004. 12.
- 신준섭,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클라이언트 폭력 연구 :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27호, 2008, 37-68면.
- 오정수 외, “피학대아동의 권리보장과 공적 친권개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21호, 2006, 29-57면.
- 이호중,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문제점과 전문법원제도의 도입방안 - 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친권제한 등의 유기적 연계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7. 10. 30, 207-237면.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2008. 9. 30, 127-167면.
- 정윤수/이정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2권 제3호, 2003, 240면.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 실태』, 2008.



Abstract

Enhancing Safety of Child Protection Service Workers

Ho-Joong Lee

(Associate Professor, Sogang University Law School)

The Korean justice system in dealing with child abuse encompasses two distinct subsystems :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child protection system. These subsystems are functioning as separate, and the major mission of child protection service(CPC) workers is to provide the maltreated children and their family with appropriate protection services. But many CPS workers have experienced violence or any other threats to their safety in working with children's parents or other guardians. This may impede the effectiveness of child protection intervention.

This paper reviews the interactions between these two subsystems in intervention of child abuse cases and proposes that safety of CPS workers can be enhanced by structural improvement of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CPS workers and police officers. Typically child protection agencies initially screen out the cases based on many suspicions and other informations, and the cases are referred to police and prosecutors only when the CPS worker has an opinion that the seriousness of the case justifies the punishment. This practices expose the CPS worker to serious danger, because it seems to be that the CPS worker executes their duties just like a police officer.

So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oordinate cooperations system between CPS worker and police officer should be anchored in our two-track system.

Especially when CPS workers have information that indicates that the family behavior or situation could pose a danger to CPS worker, they must coordinat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activities with police officers.

▶ Key words Child abuse, Child protection service, Safety protection of CPS worker